

2006 환경부 국정감사 음식물쓰레기, 미군오염문제 등 집중 거론



환경부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렸다.

이번 국정감사에는 미군오염문제를 비롯해 음식물쓰레기, 대기오염과 수질 오염 등이 집중제기됐다.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의 주요 질의 내용을 정리한다.

음성지역 소규모 개별공장 난개발 심해

김종률 의원(열린우리당 충북진천 괴산, 음성군)



김종률 의원에 따르면 음성군이 전국적으로 공장입지 선호지역 중 한곳으로 손꼽히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에 입주하는 소규모 개별공장의 난개발 정도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전환경성검토 비협의사업장의 경우 협의사업장에 비해 환경관리실태가 열악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음성군 소재 사전환경성검토 사업장의 협의의견 이행률이 매우 저조하고 비협의 사업장의 난개발이 크게 우려된다 는 것.

협의사업장 16개소와 비협의사업장 19개소 등 모두 35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음성군 개별공장 실태조사」 결과 전체평균 난개발 정도가 3.03에 달했다. 난개발 정도는 친환경적 개발 1, 난개발 5를 기준으로 1~5 사이의 수치가 낮을수록 친환경개발이 되고 있고 수치가 커질수록 난개발 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김 의원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사업장의 평균 난개발 정도는 2.26으로 비협의사업장 3.36에 비해 친환경적으로 개발되고 있지만 조사대상 16개소 중 협의의견 미이행 사업장이 10개소에 달해 이행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형별 미이행 사례는 수질 및 경관영향 저감대책 미흡, 오수처리 협의기준 초과 등이 많았다.

김 의원은 “양호한 입지여건을 갖춘 음성군이 지속 가능한 개발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친환경적 개발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군반환기지 협상력 부재 드러내

이강래 의원(열린우리당 전라북도 남원시, 순창군)



이강래 의원은 반환 기지의 환경오염 치유수준과 방법은 양국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절차합의서(부속서A)에도 불구하고, 환경치유라기 보다는 오염원 청소에 불과한 미국의 KISE기준 +8개항 치유를 수용하는 바람에 수천억원으로 추산되는 반환기지의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치유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1년까지 국내 70여개의 미군기지 중 오산 공군기지와 평택, 대구기지 등 대형기지를 제외한 59개소의 미군기지와 훈련장이 반환될 예정이라며 환경부가 반환예정 미군기지 29곳에 대한 환경오염실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총 26곳이 국내 환경오염 기준치를 초과했고, 14곳은 토양과 지하수 모두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환경오염 조사가 끝난 29개 미군기지의 오염 치유비용은 ‘가’급 기준으로 1,205억원, ‘나’급 기준으로 277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라며 “반환예정인 미군기지는 대부분 공원이나 시민들의 공공시설로 논의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의 경우 대부분 ‘가’급 지역의 환경치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반환될 예정인 기지들도 이번 합의가 선례가 돼 환경오염이 제대로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환 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는 무엇보다도 환경문제에 대해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 정부의 협상력 부재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협상과정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소관부서인 환경부의 역할이 매우 미약했던 것으로 나타나 향후 국방부 등과 함께 ‘환경치유비용 협상 T/F팀’과 같은 기구를 별도로 구성하여 이후 협상에서 환경부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반환 이후에 발견되는 오염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오염 원인을 확인하고 그것이 미군에 의해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향후 협상 과정에서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 비해 크게 나빠져다고 분석했다.

특히 수도권대기환경정책은 산업단지를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대책의 경우 수도권의 대기관리권

역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환경부의 임의적 권역 설정은 수도권 내 취약한 산업단지의 대기관리는 포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시화·반월지구의 유기성화합물질 및 악취관련 민원은 02~05년까지 1,445 건의 민원이 발생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시화·반월지역 유해대기오염물질조사연구 자료에 따르면 발암물질인 VOC의 일부물질이 다른 산업단지보다 3~7배나 높은 수치가 보고되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시화·반월지구의 경우 수도권의 산업단지로써 저소득층 주거지역이고 무허가사업장 밀집지역으로써 배출허용기준 강화같은 직접 규제보다는 특별법 내에서 경제적 유인이나 자발적 협약 등의 대책 마련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하천퇴적물 중금속 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신상진 의원(한나라당 경기 성남 중원구)



신상진 의원은 인천서구 가좌동, 크롬 기준치가 최대 238.5배를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04년과 2005년 2차례에 걸쳐 대

기, 하천, 토양, 하천퇴적물에 납, 수은, 카드뮴, 크롬, 비소 등 중금속 농도를 측정하는 '위해우려물질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위해우려물질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대기의 경우 카드뮴 농도가 WHO 권고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천 및 해양퇴적물의 경우 중금속(납, 수은, 카

드뮴, 크롬, 비소) 함유농도가 높게 검출됐다.

신 의원은 공단배출수 방류점 퇴적물의 중금속 함유농도가 높게 검출되었고, 일반 하천퇴적물에서도 다른 매체에 비해 중금속이 많이 잔류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1차 위해우려물질모니터링 공단배출수 방류점 퇴적물 분석결과를 보면 인천 서구 가좌동(가좌하수종말 처리장 방류구)에서는 중금속인 크롬(Cr)이 8894.343mg/kg이 검출됨. 이는 캐나다 환경부의 담수 퇴적물 기준치인 37.3mg/kg을 무려 238.5배나 초과한 것이며 울산 올주군 온산읍 원산천 하류(온산역 뒤편 배수로)의 경우 카드뮴(Cd)이 23.014mg/kg이 검출돼 기준치인 0.6mg/kg을 38.4배 초과한 지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산천 하류는 납(Pb)도 1000.479mg/kg이 검출돼 기준치인 35mg/kg를 28.6배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캐나다 환경부의 담수 퇴적물 기준치를 초과하여 중금속이 검출된 지점이 다수 있으며 제1차 모니터링 결과만 놓고 보았을 때 하천퇴적물 시료채취 75개, 150지점 중 납(Pb)이 기준을 초과한 지점이 31지점으로 전체 20.7%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잔류허용기준(수은 : 0.5mg/kg, 납 : 2.0mg/kg이 하) 보다는 1/10~1/2 정도 낮게 검출됐으나 비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금속의 검출율이 높음. 봉어, 잉어, 조개도 중금속 오염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천생물 시료채취 21지점에서 채취한 봉어의 경우 카드뮴과 크롬, 수은이 높게 검출됐고, 또 4지점에서 채취한 봉어의 경우 카드뮴, 수은이 높게 검출돼 이들 지점의 봉어가 중금속에 심하게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조개의 경우 납, 크롬, 카드뮴, 비소, 수은 등 가릴 것 없이 검출됐으며 특히 조개의 경우 카드뮴의 검출이 높다고 분석했다.

신 의원은 권고기준은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설정된 것으로 국내 퇴적물 농도와 비교, 위해수준을 평가하기에는 제한된 수치이며 따라서 향후 국내 퇴적물 특성에 맞는 관리기준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자체 대형폐기물 불법처리

안홍준 의원(한나라당 경남 마산시 회원구)



안홍준 의원은 유해폐기물인 폐가구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폐가구는 매립이 금지되어 있으나, 232개 지자체 가운데 55개 지자체가 폐가구를 파쇄하여 매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37개 지자체는 재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5개 지자체는 숯제조 공장에 반입하고 있으며, 1개 지자체는 퇴비제조업체로 보내고 있다.

폐인트나 방부재 등으로 오염된 폐목재를 숯이나 퇴비로 재활용하는 것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불법이라는 것이 안의원의 주장이다.

반면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가구를 파티클보드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한다.

안 의원은 폐가구 재활용에 대한 기술개발도 필요하고 우리나라 파티클 보드 제작업체는 폐가구 등을 15%에서 20% 정도밖에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나, 이탈리아의 경우 80%까지 폐가구를 원료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달했다며 유해폐목인 폐가구의 소각이나 매립을 막고 나무판으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실패한 음식물쓰레기 정책

이경재 위원(한나라당 인천 서구 강화군 을)



이경재 의원은 직매립 금지 제도 실시 전후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비교해 본 결과, 직매립금지 전인 2004년보다 2005년 1~5월에 하루 평균 619.2톤이 증가해서 오히려 늘어나고 있었는데 이번에 자

료를 받아 2004년과 2005년 전체를 비교해 보니, 하루 평균 1,565톤이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손실이 연간 15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감량화에는 실패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이런상황에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율이 90%를 넘어섰다고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환경부가 주장하는 재활용율 90%의 근거는 전체 음식물쓰레기 중 자원화 시설에 보내진 양을 가지고 산출했으며 만약 쓰레기를 사료나 비료 목적으로 가공했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다시 버리게 됐다면 이것은 재활용된 것이냐고 물었다.

환경부에서 주장하는 90%대의 재활용은 바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나 퇴비 목적으로 그냥 단순히 만들었다는 수치일 뿐이라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대부분에서 심각한 악취가 발생하여 주민과의 마찰,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수질TMS의 근거 법안은 올 7월에 예고되었을 뿐인데, 벌써 사업은 진행되고 있었다며 올 초 2월에 수질 TMS 구축을 위해 해당업무 일체를 환경부가 환경관리공단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역무대행사업 계약이 이루어졌고, 5월 12일에는 관제시스템 설치 공사 계약을 하였고, 지난 9월에 이미 관제센터는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체계를 무시하고 유사법률이 있음에도 아무렇게나 법을 만드는 염장수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하수관거 공사 부실

정진섭 의원(한나라당 경기 광주)



정진섭 의원은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부실시공으로 하수관에 균열이 많이 생기면서 빗물과 지하수 등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될 맑은 물이 오수관으로 유입이 되고 있어,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하기

전, 즉 합류식 하수관거 시대와 달라진 것이 없으니 결국 사업실패요. 6,500억원의 예산낭비라고 주장했다.

특히 분류식 하수관거를 도입한다고 분뇨를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오수관으로 배출시키고 있어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우기시에는 오수관의 균열 틈으로 빗물 등이 대량 유입되면서 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을 넘는 유입하는 처리 없이 그냥 하천으로 월류되는데, 이 때 처리되지 않은 생분뇨가 하천으로 같이 방류되고 있어 방류수역과 팔당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4대강 수계관리기금 운용 문제점 지적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용인시을)



한선교 의원은 한강환경관리청 국정감사에서 4대강 수계관리기금의 자산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목표수익률 미달은 물론 목표수익률은 설정에 있어서도 수시입출금 상품과 6개월 정기예금의 목표수익률

을 동일하게 설정하는 등 아마추어리즘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금운용에 있어서도 동일금융기관 동일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기금별 실현수익률이 0.4% 이상 차이가 나 기금운용 수익성 제고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주사 또는 주사보 1인이 기금 운용을 전담하다 보니 전문성 및 책임감 결여로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로 낙동강 및 금강유역환경청은 특별한 금리 우대 등의 혜택도 없이 원거리에 있는 금융기관을 일회성으로 거래한 사실도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목표수익률을 콜금리 + spread로 변경 설정 할 것을 촉구했다.

PCB 처리대책 수립 지역 한전 눈치보기인지 단병호 의원(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환경부는 지난해에 2015년까지 PCB를 근절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으나, 만 2년이 되어 가는데도 단계별 감축목표와 세부추진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 의원은 PCB의 유해성은 국민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모든 폐변압기에 대해 분석을 해야 하며, 특히 농도가 서로 다른 물질을 섞어서 분석을 한 번만 한다는 것은 고농도의 PCB를 희석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있을 수 없으며, 실제 혜택을 보는 배출자는 한전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에서 연간 6만대 이상의 폐변압기가 발생되는데 그 중 한국전력의 폐변압기 발생량이 5만5천대를 차지하나, 아직까지 PCB에 대한 처리대책이 마련되지 않아서 폐변압기는 계속 쌓여가고 있으며 그 중에 한전이 자체 보관중인 폐변압기는 전국 25개 사업소에 9만여대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한전은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바다, 지붕 등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채 폐변압기를 야적된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며 이런 상태가 장기화되면 2차오염의 가능성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환경부는 PCB처리대책 수립이 지역되면서 폐변압기 보관 기간이 길어지자 배출자의 장기보관을 허용해 주기 위해 지정폐기물은 최대 1년까지만 보관이 가능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단 의원은 이와관련 대책 수립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한다고 해도, 이것은 한전에 대한 특혜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들어 PCB 관련해서 환경부가 한전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의혹. PCB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처리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한 처리대책 마련이라고 제시했다.

시멘트 소성로-부원료 보조연료 유해성 우원식 의원(열린우리당 서울 노원구을)



우원식 의원은 시멘트 소성로-부원료 및 보조연료 유해성을 집중 추궁했다.

우 의원은 시멘트소성로에서 산업부산물 및 폐기물을 확대 사용함에 따른 제품 및 대기배출물질에 중금속에 대한 문제가 나타날 우려가 있고, 외국의 경우 중금속을 포함한 규제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개정(안)에는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05년 국정감사때 자료를 보면, 영월지역의 현대시멘트와 쌍용시멘트의 인근 지역인 신천2리와 쌍용6리의 농작물 사과와 배추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조사한 국내 대표식품(117개) 중 금속 함량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Pb의 경우 검출되지 않는 반면 쌍용6리 사과는 0.7mg/kg로 나타났고, ▲Cr의 경우 사과 및 배추 모두 약 2배 초과 ▲Cu의 경우에도 사과는 약 11배 ▲배추는 16배 등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낙하분진은 지정폐기물유해물질함유기준에 비교해서 납 290mg/kg으로 96배, 카드뮴 6mg/kg으로 20배, 비소 28mg/kg으로 18.6배, 구리는 67mg/kg으로 22배 등으로 나타났다.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시기와 관련 시멘트소성로에서 산업부산물 및 폐기물을 확대 사용함에 따른 문제점들을 배제하고 시행시기를 2010년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소성로를 측정한 결과(2005년 국감자료), HCl은 40~61.1ppm 범위로 나타나 소각시설기준인 30ppm을 모두 초과했다는 것이다.

규제기준 시행시기를 2010년으로 미루는 것은 현재 시멘트소성로에 투입되고 있는 산업부산물 및 폐기물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2007년 중 시행 방침을 정하고 여타 상기에 제시된 부분들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멘트 소성로에서 가연성폐기물 사용으로 인한 배출가스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규제기준도 미흡하고, HCl, Hg, 다이옥신 기준(안)도 시행시기를 2010년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지정폐기물인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폐락카 등을 혼합하여 만든 WDF에 대한 품질기준에 할로겐족물질을 포함하여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F, Cl, Br, I 등의 할로겐족 원소가 함유된 할로겐족 유기용제는 발암물질이며, 흡입시 호흡곤란, 경련 등의 증상이 일어나고 심할 경우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매우 유해한 물질로서 관리되고 있으며, 시멘트업체에서 사용하는 WDF의 5개 항목의 할로겐족물질이 검출되었다. 이외에 황, 발열량, 카드뮴, 크롬, 납, 수은, 비소, 염소, 잔류탄소, 회분, 수분 및 침전물 등에 대해서는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용역보고서로 제출한 「WDF 제조 및 사용의 적정관리 방안 마련」을 기반으로 품질기준(안)을 검토하여 마련하였지만 WDF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기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국회 환경노동위(위원장 홍준표)가 지난 17일 경기도와 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천200만 수도권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팔당호를 직접 시찰, 수질 상황을 점검하는 모습